

데스크시각



김미은
여론매체부장·편집부국장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를 이끌었던 이금주(1920~2021) 할머니의 평전 발간 소식이 내용이 궁금했다. 지난해 그의 삶을 소재로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접했던 터였다. 뒤늦게 평전 '어디에도 없는 나라'를 읽다 사진 한 장에 마음이 내려앉았다. 지난 2012년, 63년 간 살았던 광주를 떠나며 손녀와 집 앞에서 이삿짐 트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평전을 읽기 전까지는 할머니가 광주의 '그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할머니를 떠올릴 때면 나는 단체 현판이 걸려 있던 진림동 양육집과 2층으로 올라가던 계단이 가장 먼저 생각나곤 했다.

일제 피해자 인권 지킴이...민중 가수

초보 사회부 기자 시절 할머니를 몇 차례 취재했다. 책에서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부끄럽게도 평소에는 모른 채하다 '무슨 날'이나 되야 취재하는 게 기자인 지라 내가 유족회 사무실이었던 할머니의 집을 처음 찾은 것은 3·1절이나 8·15를 앞둔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당시 70대 중반이었던 할머니는 수십 년 동안 모아 온 자료와 서류를 바탕으로 기본 지식도 없던 어린 기자의 취재에 성실히 응해 주었다.

일제가 저지른 전쟁으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부모님과 동생들을 보내고, 아들과 며느리마저 저 세상으로 보

이금주·정세현·임영희, 그리고 우리

내는 세월 동안 할머니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내 잘못이 있으면 백 번 사죄하되, 잘못이 없을 때는 목에 칼을 들이대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던 할머니는 흐트러짐 없이 언제나 강인한 모습으로 일본에 대항했다.

지난 6월은 오래 전 만났던 사람들과 '그때'를 되돌아볼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그달 20일 전남대 대강당에서 열린 '밤은 정세현 10주기 추모 음악회'도 그중 하나였다. 그를 떠올리면 두 모습이 오버랩된다. 대학 신입생 시절, 광주YWCA에서 열렸던 노래패 '친구' 발표회에서 노래하던 정세현(1961~2013)의 모습과 기자가 된 후 범능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한 그를 인터뷰 하러 화순의 한 사찰을 찾았던 기억이다.

친구 이상호 화백의 작품 속 정세현은 맑은 목소리 만큼이나 편안한 보였다. 공연에서는 1980~90년대 민주화 현장에서 정세현이 만든 '광주출전기' '꽃아 꽃아' 등의 노래를 불렀던 동료·선배들이 그 노래를 '다시' 불렀다.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의 10분지 1만 자기 몸을 사랑했어고, 약자들에게 베풀던 그 정성의 1000분지 1만 자신에게 베풀었어고 쓰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읊은 오랜 벗 고규태 시인의 시도 흘렀다.

에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양림동 소녀'로 서울국제노인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임영희(67) 씨와의 만남은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취재를 위해 만났지만, 인터뷰는 뒷전인 채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생애(史)이자, 광주·전남의 시대사이자, 지역의 민주화·문화운동사였다. 수피아 여중·고 재학시절 문학도를 꿈꿨던 그는 사회 운동을 하며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극단 광대 단원으로 활동했고, 80년 오월 광주의 시민군이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에도 참여했다. 뇌졸중으로 마비된 몸을 극복해 왼손으로 그림을 그려 책을 펴냈고, 아들과 영화를 만들었다. '양

림동 소녀'는 수억 원을 들인 그 어떤 작품보다 가장 감동적인 '오월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세현 추모 음악회는 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가장 뒷쪽 임시 의자에 앉아 관람했다. 객석을 채운 대다수의 관객은 아마도 운동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거리에서 앞장 서 싸웠던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그들처럼 개인 안위를 살피지 않고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들은 '또 다른 기득권 세력'으로 치부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 그들 모두를 매도하지는 않았던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지는 않았던가 돌아보게 된다.

옆에서 눈물을 흘리던 한 남성을 보았다. 이날,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는 이도 있었을 것이다.

아들과 만든 영화 '양림동 소녀' 감동

이금주가, 정세현이, 임영희가, 그리고 이름 없는 많은 이들이 있어 역사의 발전은 멈추지 않는다. 양극단 할머니는 일본에 맞서 여전히 싸우고 있고, '판결금'을 거부한 이들을 위한 모금 운동(농협 301-0331-2604-51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마침 '양림동 소녀' 원화와 영화를 만나는 전시회가 광주 동구 갤러리 생각상자(31일까지)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장은 '치유의 옷'이라는 이름표를 단 원피스가 걸려 있다. 남편 오정목 씨가 몸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양재학원에 다니며 만들어준 옷이다. 전시장을 찾아 영화 '양림동 소녀'를 꼭 보시라. 힘든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매년 꿈을 꾸는 그의 이야기 보따리는 치유의 선물이다. /mekim@kwangju.co.kr

은펜칼럼



강대석
시인

전 세계가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캐나다는 가뭄으로 두 달째 산불이 계속되고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국은 폭염으로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긴 가뭄 끝에 폭염과 호우가 날뽀기를 하는 기상 이변을 겪고 있다. 인간의 이기적인 탄소 배출과 자연 훼손 행위가 지구 온난화를 부추겨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시기를 눈앞에 두고 여야의 대립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이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과학적 검증 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을 멈추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국민의 안전과 여인의 피해가 뻔한데 정부 여당이 일본 편만 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반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모습이 마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동인과 서인의 논쟁을 연상케 한다. 당시 조선통신사로서 파견되어 1년간 일본을 시찰하고 도요토

촌부의 세상 걱정

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만나고 돌아온 정사(正使)인 서인의 황윤길은 "일본은 병선(兵船)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침략이 있을 것이므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고, 동인의 김성일은 "일본이 침범할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방어 대비로 백성을 불안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성일과 같은 동인인 서장관(書狀官) 허성이 "침략 위험이 뻔한데 왜 거짓 보고를 하나?"고 힐책하자 김성일은 "서인과 입장을 같이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황당한 답변을 하였다. 나라의 존망이 달린 위기의 순간에도 당리당략에 얽매어 민심 안정을 핑계로 거짓 보고를 한 것이었다.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문제가 아니라 당의 방침이 무엇이나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뜻이 되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서명을 함께 했으면서도 정권이 바뀌니 돌변하여 이전 야당서 방류를 찬성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정치의 비정형성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엇그제 방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IAEA의 과학적 검증 결과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하며 처리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안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말엔 신뢰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토록 안전하다면 일본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

용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1km나 해저 터널을 뚫어 먼바다에 버리려 하겠는가? 자기를 토양 오염은 안되고 바다 오염은 괜찮은가? 여기에 대한 그의 답변은 찾을 수 없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핵종 제거 시설(ALPS)로 걸러지지 않은 핵종이 삼중수소를 비롯해 6종이나 된다고 한다. IAEA는 그것들은 방류해도 바닷물에 희석되어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130만 톤이나 되는 오염수를 하루에 100여 톤씩 앞으로 30년 동안이나 방류하면 축적된 핵종이 20~30년 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는 설명이 없다.

위정자들에게 애국이란 특별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며 국민의 주권 보장을 보장하는 일이다.

앞으로 일본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요구를 해 올 것이다.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IAEA의 결론과 우리 정부 여당의 찬성을 근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물을 수입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 뻔하며, 어쩌면 머지않아 독도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훗집에서 수조의 물을 퍼마시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만약의 경우 독도 반환 요구 시에도 일본 편에 서서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두렵기만 하다. 과연 국익을 가장한 당리당략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기 고



장현우
나주시 문화예술특화기획단 단장

선진 사회에 접어들어 최근 전국 120여 개 지자체 문화재단이 운영 중이거나 설립 단계에 있다. '문화 소비 시대'는 탈산업화 이후 해외의 근로자 또는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변화와 소득 기준이 높아지며 삶의 질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를 소비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를 말한다. 새 일자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등에 전문 인력으로 구축되기도 하지만, 관광과 융합된 문화예술 활동 또한 새로운 신산업 일자리를 양산한다.

우리보다 앞서 선진 대열에 합류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국가 발전 과정이자 패권이라 할 수 있겠다. 기존 역사와 전통문화 위에 새로움을 덧댄 관광산업은 수많은 시각 미디어와 정보에 노출된 신인류의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유도하며 현대인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천 년 고도 나누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일으킨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와 스

문화 소비 시대 지자체의 성장 동력

토리를 포함한 전통문화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그 전통문화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즉 과거에 집착하고 추억이든 트라우마든 울타리에 갇혀 현재와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그 피로감을 해소하고 승화하며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영산강과 나주평야를 중심으로 문명이 일어나고 문화가 꽃을 피운 기억의 한계를 넘어 증명하고 이어져 온 삶이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말하며 다양한 목소리와 각자의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다. 그 시민 의식이 각자의 이기심을 버리고 공공 의식으로 협동하고 한목소리로 모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더 많은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영산강을 따라 형성된 인문 철학과 나주평야의 풍요로움이 바탕이 된 문화는 수많은 서원을 비롯한 나주학으로 대변되는 정체성을 확보해왔고 역사 문화와 생태 환경이 살아있는 콘텐츠로 이어져 왔다.

고대의 시간이 기록된 고분과 유적, 풍요 속에 전해진 인문학, 영산강 기반의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환경, 복원된 금성관 목사와 4대 성문, 전국 최고 수준의 향교, 한수제에서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나주천 복원, 한옥과 골목 문화가 살아있는 도심권, 화남산업, 각 개인의 고추택과 근대 문화, 흥여거리와 영산포 언덕, 천연염색박물관, 나주호, 불회사, 금성산, 가야산,

산림자원연구소, 드림강과 지식천, 백호문학관, 국립 나주박물관, 고분박물관, 구진포 터널과 장어, 나주 곰탕 등 셀 수 없이 많은 콘텐츠가 점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적응에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었고 그에 따른 기대 심리가 미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나주가 수천 년의 농경 시대를 풍요와 함께 해 왔고 수많은 인문 철학과 문화예술이 탄생했지만 불과 100여 년의 산업 사회 들어 정치적 소외와 편견, 경제적 요건의 불충족 등이 현대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이제 문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도시 재생이 시작되었고 그 시그널은 선진국 진입이라는 '문화 소비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거의 모든 지자체가 관광산업에 집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재단과 관광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주 또한 후발 주자로 부족한 콘텐츠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 기존의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문화예술 활동성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수년 안에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될 지역의 미래는 민간 서로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며 지역민의 관심과 의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잘 준비하여 이기심을 버리고 공공 의식이 발휘되어야 새로운 시대정신을 만들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社說

월세 못내는 공공임대 취약계층 보호책 강구

광주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상당수 임차인들이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시공사는 영구 임대 주택 4685세대를 비롯해 국민 임대 1536세대, 행복 주택 1200세대, 공공 임대 73세대 등 총 7494세대의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기준 7.32%에 달하는 549세대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 중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장기 미납 임차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문자와 우편으로 월세 납부를 유도하다 지난 2월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평균 25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한 63세대로, 체납액 규모는 1억 1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27세대는 재판 전에 체납한 월세를 안냈지만 나머지 36세대는 그대로 소송이 진행됐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한 임차인은 입주한 지 5개월 만에 체납하기 시작해 2년 동안 미지급 월세와 이자가 230

만 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모두 광주도시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대로 집행한다면 이들은 공공 임대 주택에서 쫓겨나야 할 판이다.

이처럼 월세를 장기 체납한 임차인들은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원받은 주거 비용을 대부분 의료비나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와 각 구청은 월 5만 원 대에 불과한 월세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연체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령이나 투병 등으로 인해 매달 주거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불가피한 주거 취약계층이라면 비영리 단체의 후원을 연결시켜 주는 등 다양한 보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회 발전 특구' 지정, 공공기관 이전 속도 내야

지방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분산됐던 관련 조직이 통합된 만큼 실질적인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제 세종시 청사에서 우동기 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었다. 우 위원장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

하는 '상향식 균형 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하게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조직과 기능을 합친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중앙 부처 주도의 하향식 분권·균형 발전 계획을 각 시도별 계획을 기초로 한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 과제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 발전 특구'의 조성이다. 이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 지방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역 격차 해소에 꼭 필요하다. 가속화되는 지역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두 가지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민법이 권리 주체인 인간을 제외한 유기체를 모두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폭염 속 반려동물이 차 안에 갇혀 있을 때 제3자가 유리창을 깨고 개를 구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긴급 피난'을 근거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2021년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내에선 동물이 '원고'가 돼 소송을 낸 사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2003년 환경단체가 경남 양산시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제기한 경우고속철도 공사 중지 가치분 소송이 대표적이다. 환경단체는 도롱뇽이 터널 공사로 환경 이익을 침해받는 만큼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연물에 불과한 도롱뇽은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2008년에는 군산 어린이들이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로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계획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고, 2018년에는 설악산에 서식하는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설악산 오색계이불가 설치를 막으려는 소송을 냈지만 모두 각하됐다. 동물에게 소송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긴급 피난'을 근거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에선 2014년 동물원에 갇혀 있던 오랑우탄 '샌드라'와 침팬지 '세실리아'를 원고로 "풀어달라"는 소송(인신 보호 영장 청구)이 제기됐는데 법원이 받아들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를 청구인을 넣기로 했다. 어떤 고래 종을 청구인으로 넣을지까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국민의 94%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동물이 보호의 객체를 넘어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을 때도 됐다.

/장필수 사회탐담 편집국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주간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주국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